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양지빌딩 2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문서번호 : 17-4-과거사위-3
수 신 : 제 언론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 청산위원회
발 신 : - 위원장 서중희 010-8256-6877
- 부위원장 이선경 010-5541-4608
제 목 : [민변][과거사위][공문] 제 19대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과거사 청산 위한 7대 과제] 제안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7. 4. 26.(수)
전송매수 : 총 14 매

제 19대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7대 과제] 제안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귀 언론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퇴보한 과거사 10년 역사를 반추하고 과거사 정의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과거사 제 단체들은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과거사 청산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향후 과거사를 중요한 국정 과제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일정

1. 일시 : 2017.4.26.10:30
2.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3. 기자회견 일정

사회 : 서중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 여는 말 (안병욱.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과거사 단체 및 개인 발언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염 대표)
 -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허상수 공동대표)
 -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 유족회 (김광년 대표)
 - (사)전국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강민조 이사장)
 -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차준원 이사)
 -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윤호상 대표)
- 현재 주요 과거사 법률안 현황 등 소개 (조영선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4. 참여단체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4.9통일평화재단, 제주 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형제복지원진상규명을 위한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기념)연대회의,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포럼진실과정의, 민주인권평화재단(준), KAL858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이내창기념사업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 단체 요구사항 1]

각 대선캠프(차기 정부)와 20대 국회에 대한 현안 요구

사단법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계승연대)는 국가폭력 의문사 사건 등의 진상규명과 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과 유공 확립, 민주공원 조성 및 운영 등의 목적 사업에 동의하는 50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2000년 발족 이래 관련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계승연대의 목적 사업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민주화운동 폄훼와 좌.우편가르기 공세로 실질적 제약을 받아 사업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원내 진출한 100여 명의 의원들이 계승연대의 현안 요구에 대한 회신을 통해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에 적극적 의지와 관심을 표명하였고 제1야당이 분열하기 전 당 대표이던 문재인대표는 의회권력이나 정부권력이 바뀌면 반드시 법률 제정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습니다.

1.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이하. 민주유공자법) 제정 요구

2000년 12월 발의 이후 국회 내 각 정파의 정략적 태도와 의지 부재로 15대 국회로부터 20대 현 국회에 이르기까지 민주유공자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으나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이 모범이 되어 제정된 5.18민주유공자법은 2002년 당시 여야 정치권이 민주유공자법의 후속처리를 약속한 후 15년 동안 법률제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염원에 따라 조속한 법률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2.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이하. 민주공원) 운영권 이관요구

국비로 조성된 민주공원은 열사들의 삶과 정신을 계승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공동묘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과 궤를 함께 해 온 정부가 민주공원의 활성화를 원치 않을 뿐 아니라 아무런 계획도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년 간 10억원 내외의 예산은 공원관리사업소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절대비중으로 소진되며, 일부는 공원 유지·보수 비용과 묘역관리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공원의 조성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명실상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이천시에 3년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원 운영권”은 기간 만료와 함께 희생자와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위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민보상법)개정요구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보상위원회가 기한을 두어 신청받은 신청인들 중 일정한 심사를 통해 관련자를 인증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기회를 놓친 대상자들에게 1. 새롭게 신청 기회를 주는 문제 2. 기각된 신청자 중 기여율에 따른 심사로 인정될 수 있는 건의 처리 3. (권력의 성격에 따라)위원회구성의 불균질성으로 인해 불이익 받은 건에 대한 재심 청구의 확대 등을 포함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성과 활동의 법률적 근거 강화와 독립성 확보 방안 마련 등 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보상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사단법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제 단체 요구사항 2]

제19대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의견 촉구(안)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1975년 박정희 정권은 내무부훈령 410호를 근거로 ‘부랑인’ 이라 규정한 사람을 영장 발부 절차 없이 한국 부산에 위치한 형제복지원(1960년에 설립되었고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975년 전부터 폭력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한다.)에 강제 감금하고, 임의의 피해자가 폭행과 성폭행 강제 노역 등 폭력에 노출되어 75년부터 86년까지 513명이 의문사하도록 조치를 자행했다. 이는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거리의 사람들을 ‘형제’와 ‘복지’란 허울 속에서 ‘청소’하려는 정치권력의 의도적 행위다.

헌데 국가권력은 2017년 현재까지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사회에 밝혀진지 30년이 지났건만 진상규명은커녕 사죄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다. 2014년 19대 국회에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¹⁾이 발의되지만 사실상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2016년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2015년 행정자치부 정재근 차관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여타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적 합의 선행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이다²⁾” 라고 말하며 사실상 형제복지원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정권은 참회의 역사를 써야할 시기에, 뻔뻔하고 사나운 얼굴로 진실을 외면했고 2016년 7월 20대 국회에 재발의 된 현재 형제복지원 특별법³⁾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대선후보들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촉구한다.

- 아 래 -

1. 대선후보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요청한다.
2. 당에 속한 대선후보는 당 차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법의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요청한다.

1) 1)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2) 19대 국회, 2016. 11. 27., 제337회 4차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3)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제 단체 요구사항 3]

제19대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정책제안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우리는 한국전쟁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사랑하는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무참히 학살당하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갖은 탄압과 모멸을 받으면서 한맺힌 수십 년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 온 유족들입니다.

이에 우리 유족은 아직 다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의 매듭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다시는 이 땅에 우리가 겪은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도 제대로 된 과거사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오랜 기간 수차례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을 통해 지금까지 은폐되고 왜곡되었던 한국전쟁전후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민간인학살의 만행이 올바르게 밝혀져 당시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의 해원과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는 오래 세월 힘든 삶을 영위해온 유족들의 아픔도 조금이나마 치유되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인권과 평화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매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최근 이와 관련한 법률안 5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발의된 법률안을 근거로 우리 유족들의 절절한 요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책으로 담아 질의하고자 하오니, 향후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제안]

1.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켜 주십시오.

-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2005. 12. 1. ~ 2010. 12. 31.)때 신고하지 못한 2만 여 미신고유족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하지 못하고 중단된 사건과 관련 기관 비협조, 조사 기간 부족 등으로 불능 또는 기각 처리된 신청사건의 조사 재개의 필요성이 시급합니다.

2. 「추모시설 건립 및 유해발굴」에 대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지난 해(2016년) 정부(행정자치부/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는 2020년을 목표로 전국단위 추모시설을 대전 산내에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

도 전국 각 지역에서는 집단학살 매장지가 미발굴된 채로 방치되어 있음. 이에 유해발굴과 추모공원 조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3. 「과거사 재단」 설립에 대한 추진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희생자 위령사업, 교육관 또는 전시관 건립, 희생사건의 학문적 연구와 교육·출판사업 등을 담당할 과거사 재단을 설립하여 미래의 세대들에게 참담한 역사가 반복될 수 없음을 전해야 할 재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제 단체 요구사항 4]

일본군성노예제의 2015 한일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하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정부간 합의가 그 절차와 내용면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합의였다는 사실은 이미 분명해졌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다수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 성노예를 강요한 ‘보편적 여성인권’에 대한 심각한 범죄이다. 이에 대해 가해국인 일본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사실 인정·공식 사죄·배상·진상규명·역사교육·위령·책임자 처벌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1990년대 초에 이르러 50년 가까운 강요된 침묵을 깨고 떨쳐 일어난 피해자들이 지난 4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돌며 호소해온 것이다. 그들의 간절한 호소에 공감한 국제사회가 수많은 보고서와 결의를 통해 거듭 확인하여 국제사회의 보편적 상식이 된 것이다.

피해자를 배제한 채 피해자의 요구도 무시했고, 가해의 주체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강제성도, 범죄성도, 법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과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를 합의 해주었고, 심지어 평화비(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가 “적절히 해결 되도록 노력” 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었다. 그리고서 얻어낸 것은 10억 엔이 전부이다. 일본정부 관계자가 “일본이 잃은 것은 10억엔” 뿐이라고 공언한 것, 아베 총리가 사과 편지를 보낼 생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나는 털끝만큼도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합의 직후부터 ‘절대 반대’와 ‘무효화’를 절절히 외치고 있는 것 또한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군사작전을 감행하듯 ‘합의 이행’을 밀어붙여 왔다. 아베 정부가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거듭 못 박는데도 ‘배상적 성격의 돈’이라고 우겼고, 피해자들이 반대하는데도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을 강행했다. 시민들이 멈추라고 하는데도 10억 엔의 ‘치유금’을 서둘러 받았다.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은 그 돈을 야금야금 소비하고 있다. 이제는 일본정부에게

채무자처럼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합의이행을 강요당하고 있다.

다음 정권은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외교참사인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사실인정, 공식사죄, 법적 배상,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2015년 한일정부간 합의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합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본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을 반환하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승인받은 화해치유재단 설립도 취소, 해산시켜야 한다.

다음 정부는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넘어서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에 대한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유엔 및 국제인권기구에서의 문제제기도 계속해야 한다. 국내 및 국제인권운동단체들의 활동에 힘입어 유엔은 지속적으로 일본정부에 공식사죄와 법적배상, 전범자 처벌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고 생존 피해 할머니들의 숫자는 계속 줄어만 가고 있어 일본정부의 범죄인정·공식사죄 및 법적배상,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추모비와 사료관건립을 통한 피해자들의 치유와 인권회복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잘못된 합의를 단호하게 반대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에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반역사적인 「2015 합의」를 폐기하라.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책임을 일본정부에게 확실하게 추궁하라!
-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 일본정부의 국내외 소녀상 철거 압박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사업 실시와 역사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하라!
- 우리의 법률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기념사업을 더욱 충실하게 실시하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자회견문 : 과거사 청산을 위한 7대 과제]

역사가 바로서야, 미래가 바로 선다

2017년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하는가.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해소 이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정은 고난의 역사였다. 한국전쟁 희생자들과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염원이 담긴 진화위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인권침해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주 4.3항쟁, 의문사, 납북어부, 형제복지원, 선감원, 재일동포 등 정치권력에 의해 고통 받았던 슬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 대구 희망원 인권침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은 ‘정직한’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응징이라는 역사적 치유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반복된 비극의 역사이다.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과거사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제 단체들은 장미 19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에게 아래와 같이 해결해야할 과거사 7대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당선 이후 실천을 촉구하는 바이다.

제1과제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속히 개정해야 한다.

과거사 청산의 출발은 진상규명이다. 비록 1기 진화위 결정에 근거하여 일부 민간인학살 희생자들의 진실을 밝혔지만, 아직도 홍보와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많은 희생자가 있다. 또한 전국 100여 곳이 넘게 산천을 떠도는 미발굴 유해가 있으며, 발굴된 유골마저 차고 어두운 컨테이너에 갇혀 편안히 눈을 감지 못하고 있다. 진화위법 개정과 더불어 유해발굴 및 추모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또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많은 의문사, 인권침해사건 등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의되어 있는 진화위법안의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제2과제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국가와 군의 정책으로 집행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범죄인도에 반하는 전쟁범죄로서 ILO 제29호 협약 위반, 여성과 어린이 인신매매금지조약 위반, 헤이그 조약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다.

2015. 12. 28.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발표는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해 일본 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밝힌 바와 같이,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발표문 내지 합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조약도 아닌, 단지 정치적·도의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탄핵된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국민 의사에 반한 일본군 위안부 외교장관 합의 또한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보다 일본과의 도의적 책임이 우선일 수 없다.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한편, 이외에도 일제강점기하 강제동원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및 배상, 그리고 한국 유해송환문제 등도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제3 과제 현실성 있는 4.3특별법, 민주화 유공자법을 제정하라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서는 대한민국에게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배·보상 등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는 미흡하다. 또한 4.3사건 당시 연행된 피해자들이 당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군법회의 등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사법절차의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심의회는 현재 존속하고 있지만, 사실상 추가 신청이나 조사를 하지 않아 개점휴업상태이다. 미처 민주화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은 미신청 민주화운동관련자도 있는 만큼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5.18 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과 같이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예우·보훈을 위하여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제4과제 긴급조치, 유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위헌 결정에 따라 일부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형사 재심 등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 라면서 피해자들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더욱이 대법원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 화해 규정에 의거하여, 민보상법상 생활지원금을 받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퇴행적·위헌적 태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직도 형사재심조차 청구하지 못하는 이른바 ‘막걸리’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박정희 군사정권하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일괄구제를 위해, 제2차 대전 후 독일의 전례와 같이 유신 긴급조치 유죄판결에 대한 일괄무효와 더불어 피해자들에게 배·보상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차별적·위헌적 조항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재판상화해 조항의 삭제도 필요하다.

제5과제 형제복지원, 선감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1975.12.15.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의하여 부랑인으로 몰려 ‘형제복지원’에 강제 격리되고, 이후 강제노역, 고문, 가혹행위 및 이로 인한 513여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어린이 수용소 ‘선감원’에서의 격리와 강제노력, 폭행으로 인해 미처 피지 못한 어린 생명들이 아직도 선감도에 묻혀있다.

최근 대구 ‘희망원’ 과 같이 계속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는 과거 사회복지시설에서 행해진 잘못된 시설격리,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는 과거가 아닌 현재형 문제로서, 반드시 그 진상을 밝힘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설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여야 한다.

제6과제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납북어부 사건 등의 진실을 밝혀라

박정희, 전두환 등 군사정권하에서 간첩은 ‘창작’ 되었다. 특히 군사정권의 안정을 위하여 한국상황을 모르고 조총련, 민단이 섞여 살아가는 재일동포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한국 유학생, 직장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적게는 10여일에서 50일이 넘는 불법 감금하에 ‘간첩’을 창작하였다. 다행히 일부 재일동포들이 형사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재일동포간첩단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애증, 사법부에 대한 불신 등으로 재심조차 꺼려하고 있다.

진화위가 밝힌 동해안, 서해안 납북어부 피해자들은 1,300여명에 달한다. 진화위의 일부 진상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아직도 진상조차 밝히지 못한 채 여생을 마감하고 있다. 먹고 살기위해서, 또는 태풍을 만나 어쩔 수 없이 납북될 수밖에 없었던 생계형 어부들, 이들을 간첩으로 만들었던 정치권력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은 ‘뜻 있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절차를 통하여 일괄 구제할 수도 있다.

제7과제 정치권력에 부역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한 수사관들의 상훈을 박탈하라

역사는 진상규명과 더불어 용서와 반성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용서의 전제는 가해자의 진정어린 사과에서 비롯된다.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는 대한민국은 먼저 사과하여야 한다. 민간인학살 관련 경찰, 군인, 헌병, 인권침해 사건의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수사관, 재일동포 사건의 보안사 수사관 또한 진실을 고백하고 사과하여야 한다. ‘한 건’에 따른 포상과 승진 뒤엔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얼룩져 있다. 민간인이 공비로 둔갑되고, 재일동포 유학생은 간첩이 되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그 누구도 눈물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이들은 ‘기억이 안 난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한다. 오히려 이러한 공적으로 상훈을 받아 자신의 과오를 무용담으로 삼고 있다. 반성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대한민국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적극

가담한 가해자들의 상훈을 박탈해야 한다.

역사가 바로서야 미래가 바로 선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역사에서 진정한 대화가 있었던가, 진상규명에 따른 반성과 사과가 있었던가. 되풀이되는 참사는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정치권력과 국민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다.

우리는 과거사 청산을 위한 제 단체의 염원을 담아 위와 같이 제안하면서, 대통령 후보들의 진지한 과거사 청산에 대한 대안과 더불어 이를 위한 과감한 실천을 간절히 소망한다.

2017. 4. 26.

과거사청산의 길을 가는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4.9통일평화재단, 제주 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형제복지원진상규명을 위한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기념)연대회의,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포럼진실과 정의, 민주인권평화재단(준), KAL858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이내창기념사업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